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2주제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규제(품질·안전·조달) 합리화

2025. 8. 20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박 상 헌 부연구위원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주제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규제(품질·안전·조달) 합리화

2025. 8. 20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박상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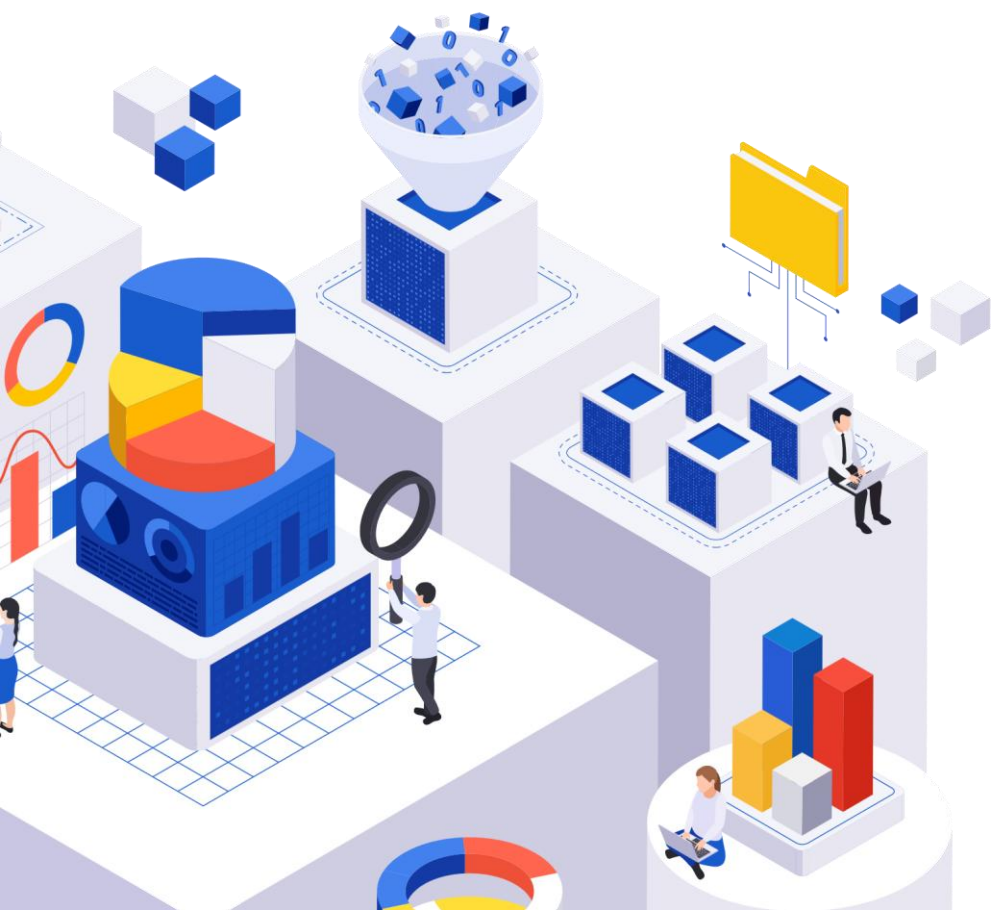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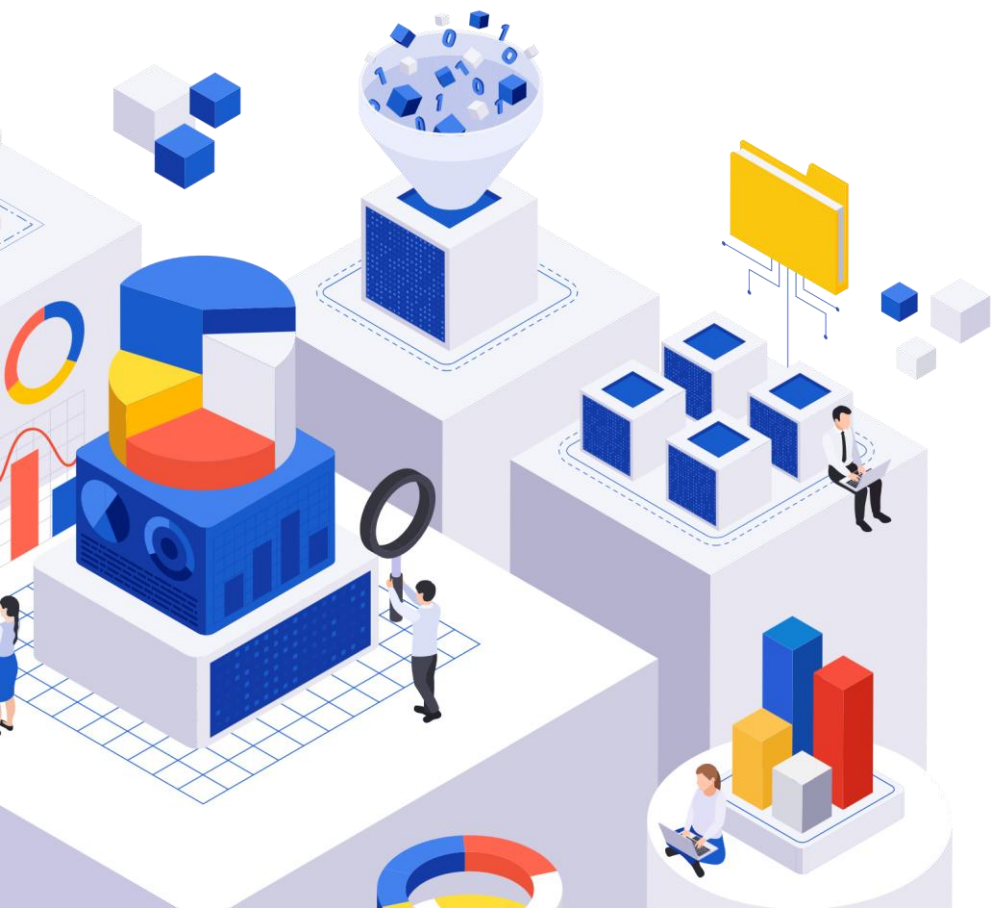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TENTS

- 1 건설 생산과정 범위와 규제들, 개별관리에서 종합 접근의 시각으로
- 2 산업 활력 저하 주된 원인 : 품질·안전 규제 강화
- 3 공공조달에서 우회·제한 평가되는 품질 및 안전
- 4 활력 제고의 해법, 규제의 다운사이징





1

건설 생산과정 범위와 규제들, 개별관리에서 종합 접근의 시각으로

① 건설 생산과정의 범위와 규제들

② 건설 생산과정 규제 간 통합 필요성

건설 생산과정의 범위와 규제들



생산과정(입찰부터 시공까지) 개별 목적 중심 중층 규제 양산 심화

기획 및 설계 단계

「건축법」

- 건축허가, 설계도서 작성 기준
- 내진설계 의무화(연면적 200㎡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기본 및 실시)

「건축기본법」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준수 및 행위 제한

⋮

입찰 및 계약 단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공사 입찰 및 계약 절차
- 안전관리 수준 평가 연계
- 지역의무공동도급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상호시장 진출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 품질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중대재해처벌법」

-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 평가

「전자조달법」

- 전자조달업무 안전성·신뢰성 확보

⋮

시공단계 (착공~준공)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기준 및 시공자격
-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작업허가제(고위험 작업)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의 9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적정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건축물관리법」

- 정기점검 의무화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해체공사 관리 기준
-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성능평가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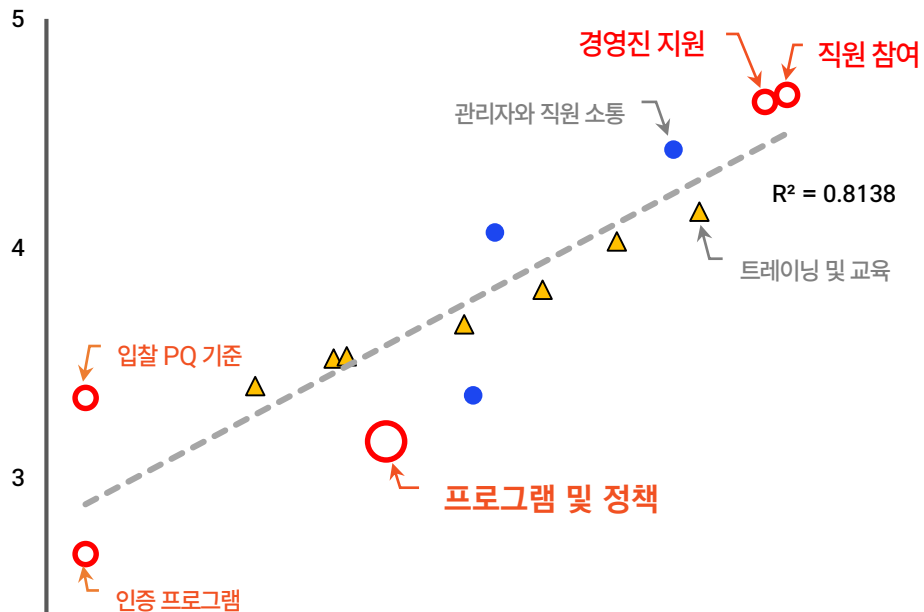
⋮

건설 생산과정 규제 간 통합 필요성



개별 규제만으로 복잡다기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요원

1. 안전과 품질 개선에 필요 요인 간 상관성



정책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요

자료 : Loushine, T.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英, 품질·안전 제고 위해 통합적 접근 전환

자료 : BESA, Understanding the Building Safety Act Gateways
Premcrete Ltd., Navigating CDM and The Building Safety Act: What Clients Need to Know

건설 생산과정 핵심 체계 : 조달·품질·안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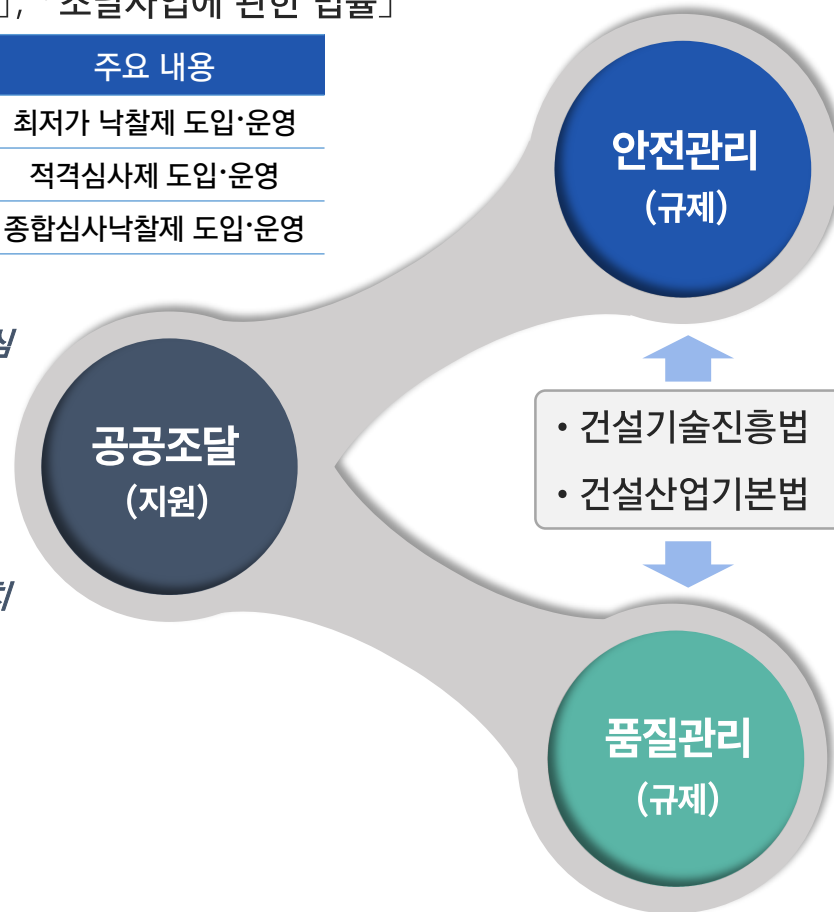


조달(지원정책)과 품질·안전 규제 연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기	주요 내용
1960년대~1990년대	최저가 낙찰제 도입·운영
1995년대~2010년대	적격심사제 도입·운영
2016년 ~ 현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운영

- ① 입찰 가격 중심
↓
② 가격+최소 품질
↓
③ 가격+기술+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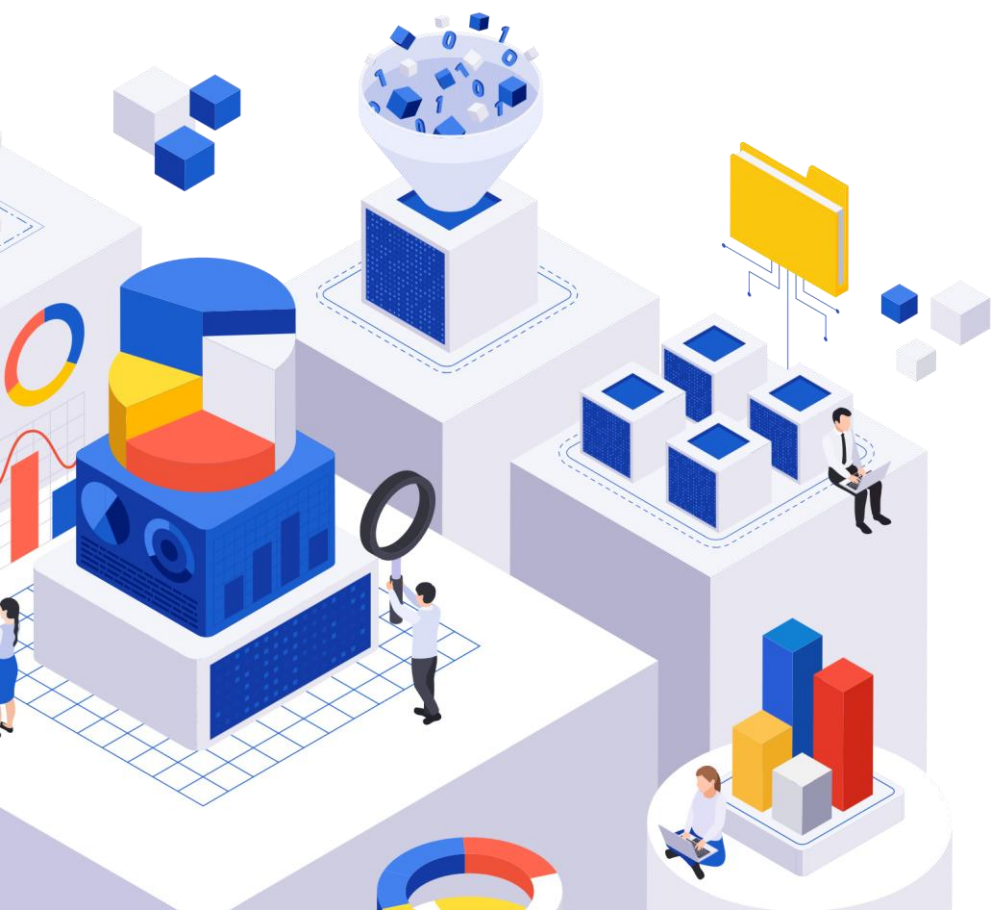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기	주요 내용
1950년대 ~ 1980년대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90년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기법 제정
2000년대 ~ 2010년대	위험성 평가, DfS 도입, KOSHA-MS 확산
2020년대 ~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발주자 책임 강화 추세

- 「건설공사 품질관리 운영지침」

시기	주요 내용
1950년대 ~ 1970년대	시공사 중심 자체 검사, 정부 관리 감독 미비
1980년대 ~ 1990년대	품질시험계획 의무화, 감리제도 도입, KS 규격
1990년대 ~ 2000년대	법 강화, 시특법 제정, 품질보증체제, CM 도입
2010년대 ~ 현재	품질관리 체계 일원화, 시공 과정 투명성 강화



2

산업 활력 저하 주된 원인 : 품질·안전 규제 강화

- ① 안전 규제 중층적인 강화, 업계 반응과 짚고 넘어갈 것들
- ② 중층적 안전 규제 시행 효과
- ③ 최초 건설업 안전 규제의 그릇된 모습
- ④ 품질 규제 대상 다변화 현황
- ⑤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품질 사고들
- ⑥ 현실이 배제된 규제 강화
- ⑦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품질 향상 유도 : 싱가포르

안전 규제의 중층적인 강화, 업계 반응과 짚고 넘어갈 것들



○ 새 정부의 산재 발생 시 강력 대응 시사 : 안전 규제와 제재·처벌 강화 예상 (국무회의, '25. 7. 29.)



반복적 산재 사고,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

산재 사망 사고 상습 발생 기업 주가 폭락하게, 건설 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 괴리

부처별 산업재해 발생 기업 제재와 수사 방침 제시

(고용노동부)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병행
(법무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검사 체제 제안, 법원 양형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위험 10개 업종 산재 예방 안전시스템 개발,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지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특별법 기업 매출액 3% 과징금 처벌 방안
(금융위원회) 중대재해 기업 ESG 평가 불이익 투자·대출 규제 방안
(조달청) 공공조달 입찰 자격 제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추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합리화 지원

거듭된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엄벌과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적 보완 지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주력 당부

정부 건설산업 안전사고 저감 목적 경쟁적 규제·처벌 강화책 마련 중

안전 규제의 중층적인 강화, 업계 반응과 짚고 넘어갈 것들



타 산업대비 과다한 전방위 중층적 안전 규제 신설과 처벌 강화로 산업 급속 위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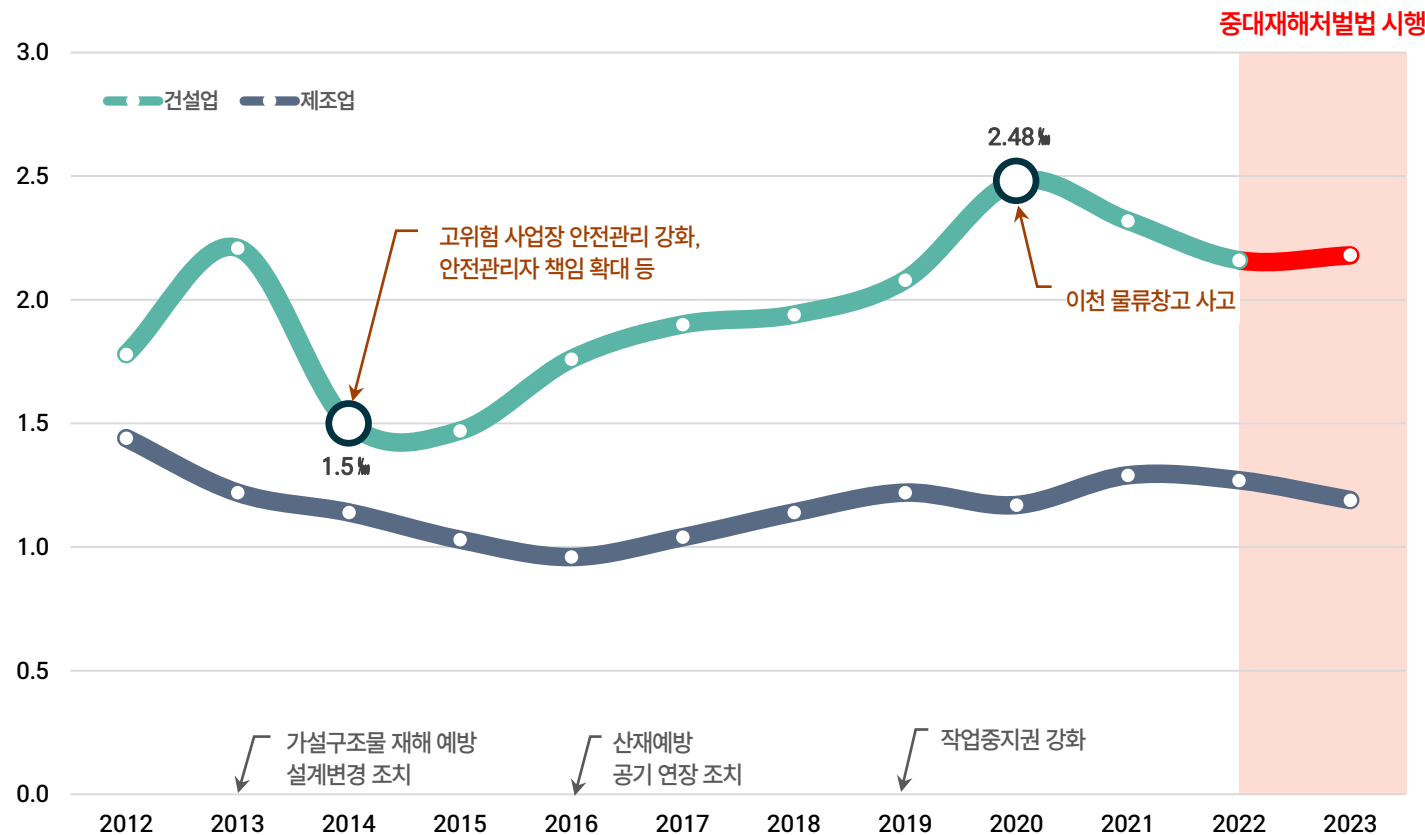


중층적 안전 규제 시행 효과 : 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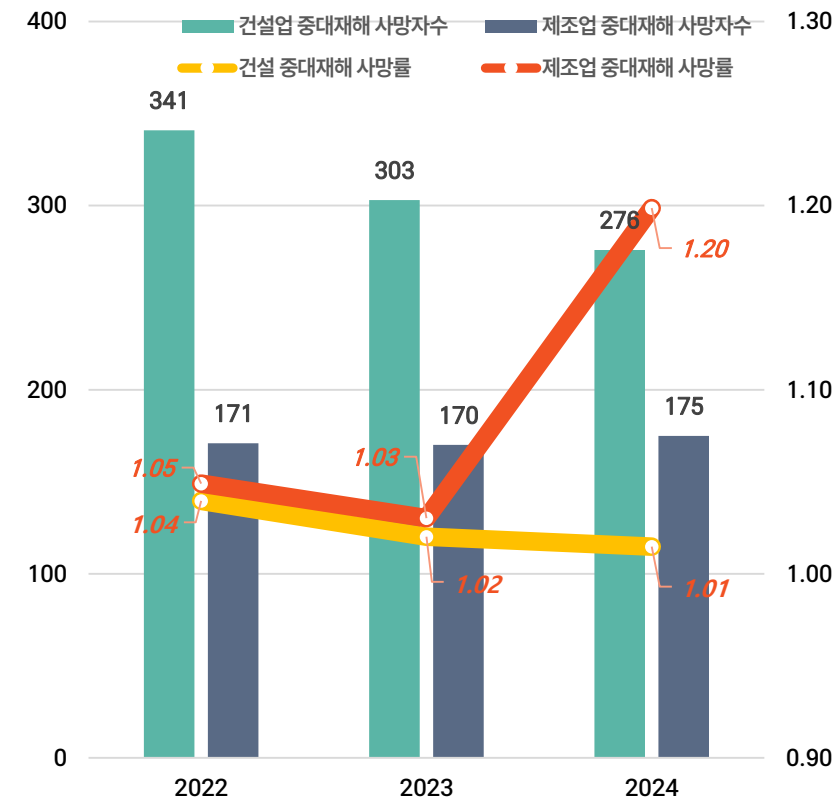
중처법 시행 후 처벌·제재 강화 효과 의문, 근원적 요인 진단과 처방 필요

1. 2012-2023 사망사고 만인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규모별 (검색일 : 2025. 8. 7.)

2. 2022-2024 중대재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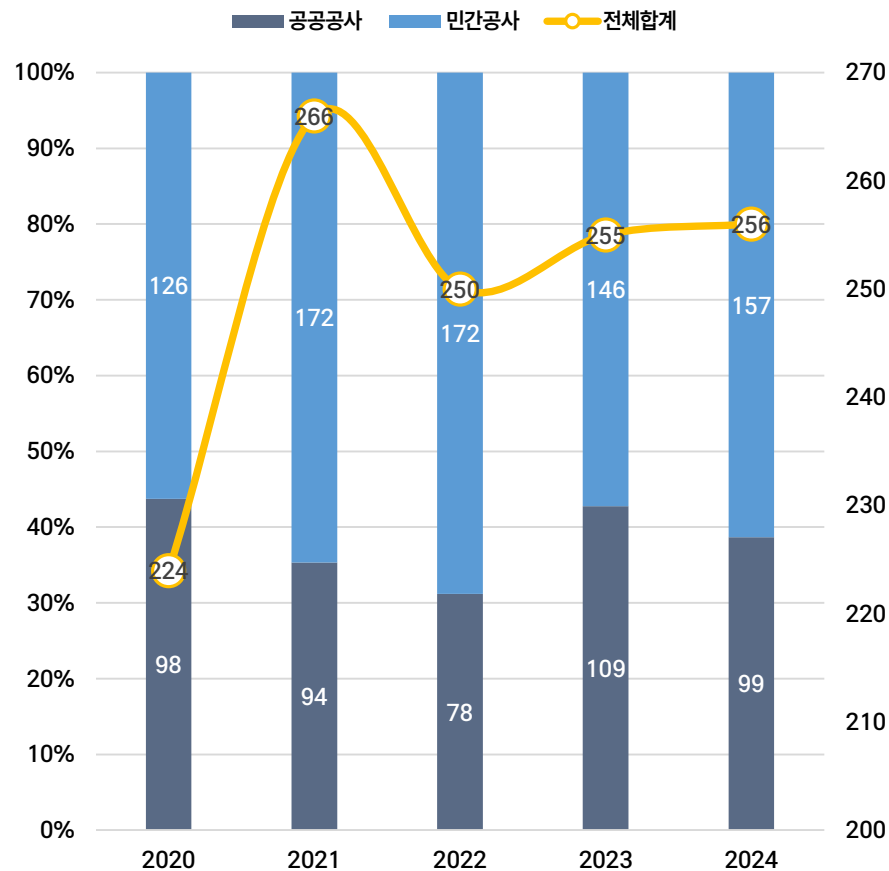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통계 (검색일 : 2025. 8. 7.)

중층적 안전 규제 시행 효과 : 사망사고 비율 및 낙찰률 구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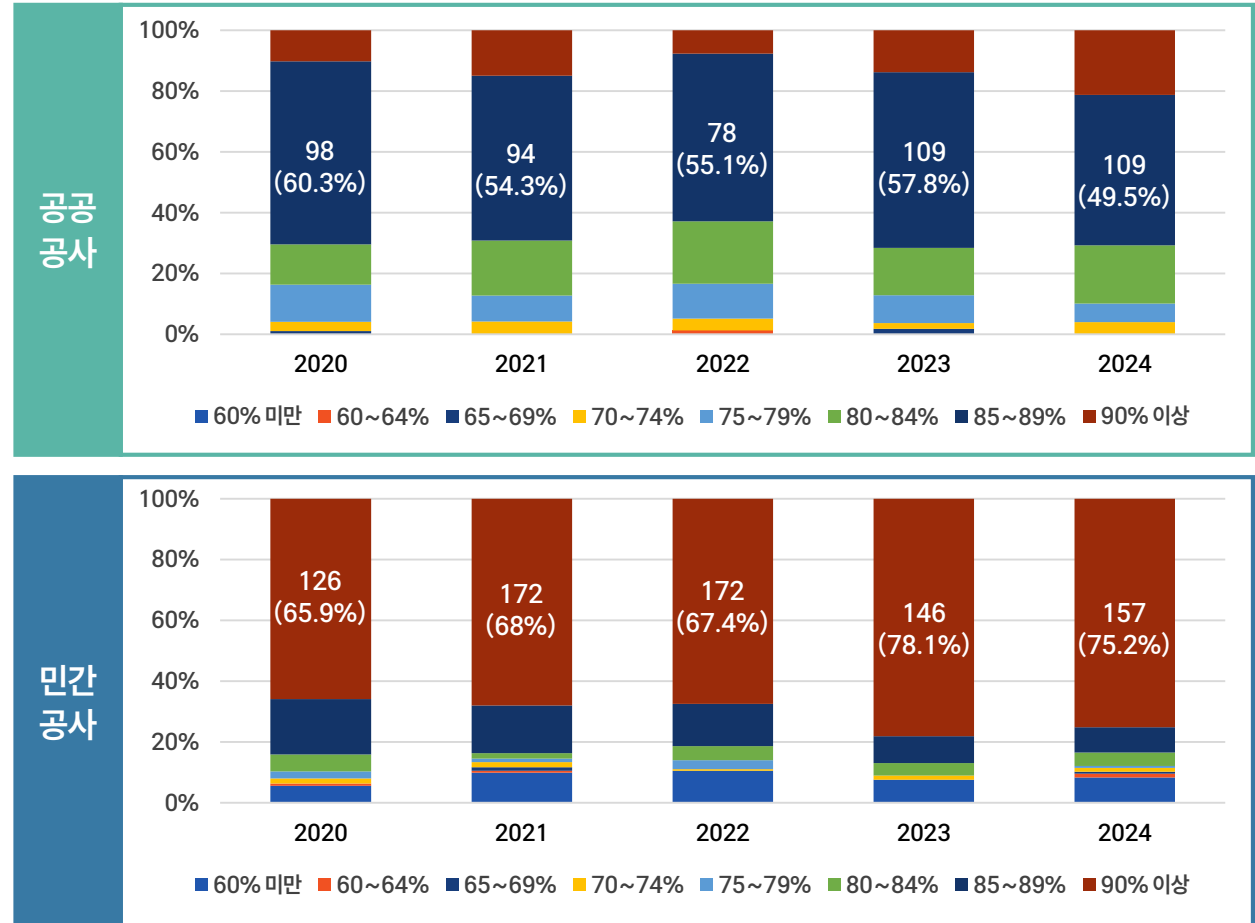
○ 민간공사 사망사고 높고, 낙찰률 90% 이상 구간 많은 사망사고 비중 → 공사비 상향만이 해법?

▶ 공공과 민간의 사망사고 현황



자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사고 사고사례 (검색일 : '25. 8. 15.)

▶ 공공과 민간의 낙찰률 구간별 사망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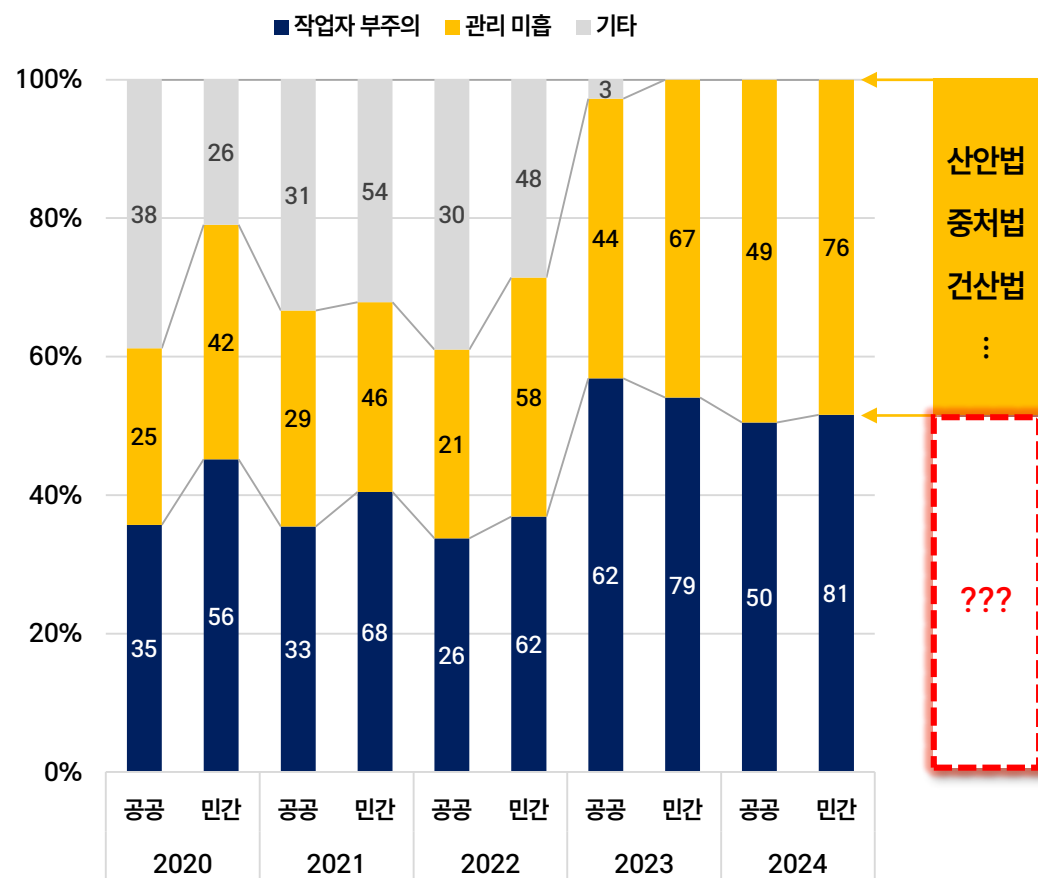


중층적 안전 규제 시행 효과 : 사망사고 원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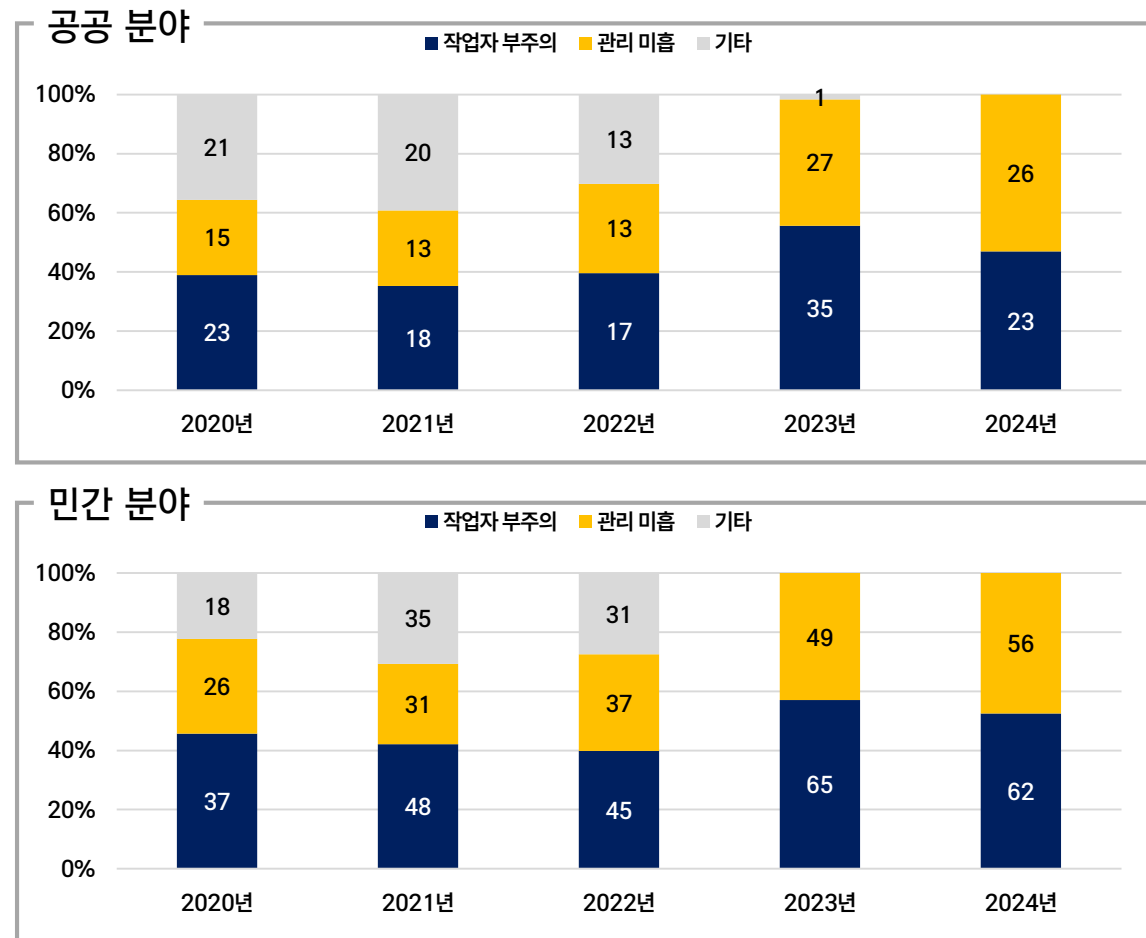


반쪽짜리 안전 규제만으로 사망사고 감소 유도 한계, 다른 반쪽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공공과 민간의 전체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 사망사고 높은 낙찰률 구간 유형별 현황 (공공과 민간)



자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사고 사고사례 (검색일 : '25. 8. 15.)

최초 건설업 안전 규제의 그릇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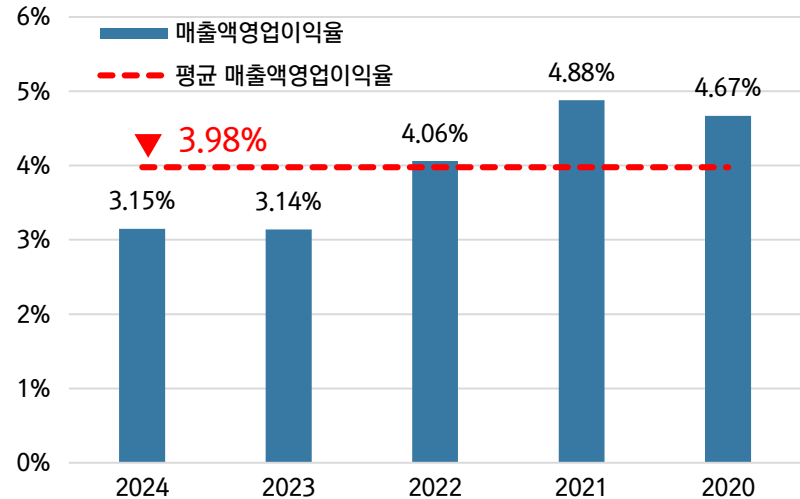


○ 건설안전특별법 과도한 처벌·제재로 업계 존속 위기 및 부담 가중

▶ 사망사고 1명 발생 시 적용하는 처벌 및 제재 현황 (싱가포르 vs. 국내)

처벌 및 제재	싱가포르 (WSH ACT)	국내 (건설안전특별법)
과징금 부과	- 기업 : S\$ 500,000 (약 5억원) - 개인 : S\$ 200,000 (약 2억원) - 위험 조치 위반 : S\$ 50,000 (약 5,400만원)	- 기업 : 매출액 3% 부과 - 개인 : 1억원 이하
징역	- 개인 : 최대 2년 이하	- 개인 : 최대 7년 이하
중지 명령	- 사고 발생 즉시 또는 현장 전체 및 일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벌점 부과	- 중상해 또는 위험사고 : 25점	- 벌점 부여 (건설기술진흥법)
고용 제한	- 신규 직원 채용 불가	- 해당사항 없음
입찰 제한	- 공공 공사 입찰 제한 (25점 이상부터)	- 부실 벌점에 따라 불이익 부여
공개명단 발표	- 기업 명단 대외적 공개	- 사고 신고 결과 공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최근 5년간 종합건설업체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4 종합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 과징금 매출액 3% 부과 시 예상 결과 (단위: 억원)

건설사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징금	납부 후
△△건설	105,036	2,428	3,151	- 723
◇◇건설	91,619	510	2,749	- 2,239
○○건설	83,184	462	2,496	- 2,034

자료 : 인더뉴스, [2024 연간실적] 3사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발체, 저자 재구성



[참고] 건설안전특별법 반대만 할 수 없는 이유

○ 現 중층적 규제(산안법, 중처법) 포괄적 적용 한계 보완, 건설업 특성에 맞는 법적 근거로 보다 나은 작업 환경 조성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 ① 발주자는 설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기와 공사비 확보”

적정 비용과 기간 보장,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

제4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 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발주자 책임 강화”

안전관리 의무 발주자 부여, 불합리한 관행 차단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3개 조항)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1개 조항)

제4절 시공사 등의 안전관리의무 (5개 조항)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2개 조항)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1개 조항)



“참여자별 의무 명확화”

책임 전가 문제 해결, 협력적 안전 문화 조성 기여

품질 규제 대상 다변화 현황 : 처벌 및 제재



○ 건설공사 참여자 역할 변화 : 단순 참여자 수준에서 품질 책임 실행자로 계속 강화 → 의무부여에 따른 제재·처벌 동시 강화

'88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계기로 제정

1988 ~ 1993년

감리전문회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이행 (6개월 업무정지)
- 감리전문회사 등록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시공감리자

-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야기
(5년 이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사업자

-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94 팔당대교 외 사고 계기로 처벌·제재 강화

1994 ~ 2013년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부실 설계·감리로 중대한 손괴 시 공중의 위험 발생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위 행위로 사망자 발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계획의 미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설계·시공·감리 등 업무 부실한 수행 벌점 부과
(벌점 부과, 입찰 시 불이익)

레미콘 또는 아스콘 제조업자

- 한국산업표준 부적합 자재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품질시험 검사자

- 미등록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대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4 건설기술진흥법 개편

2014년 ~ 현재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부실 공사로 기초·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발생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위 행위로 사망자 발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사고 내용 축소 보고 (부실공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시공·공사 중지 명령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발주자, 건설사업자

-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미계상 또는 목적 외 사용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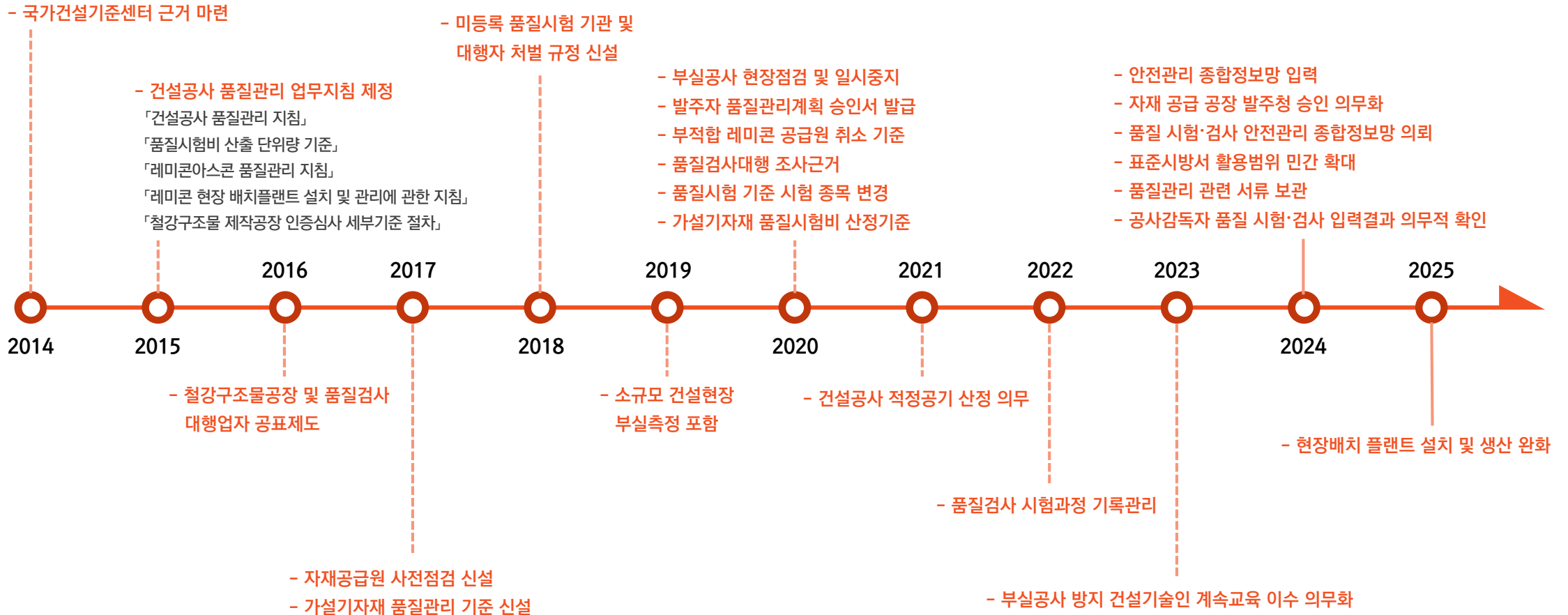
신고·통보 의무자

- 변경, 실적, 기술자 현황 등 각종 신고·통보 의무 미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품질 규제 대상 다변화 현황 : 기준 고도화



품질 기준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관련 책임 또한 계속적으로 가중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품질 사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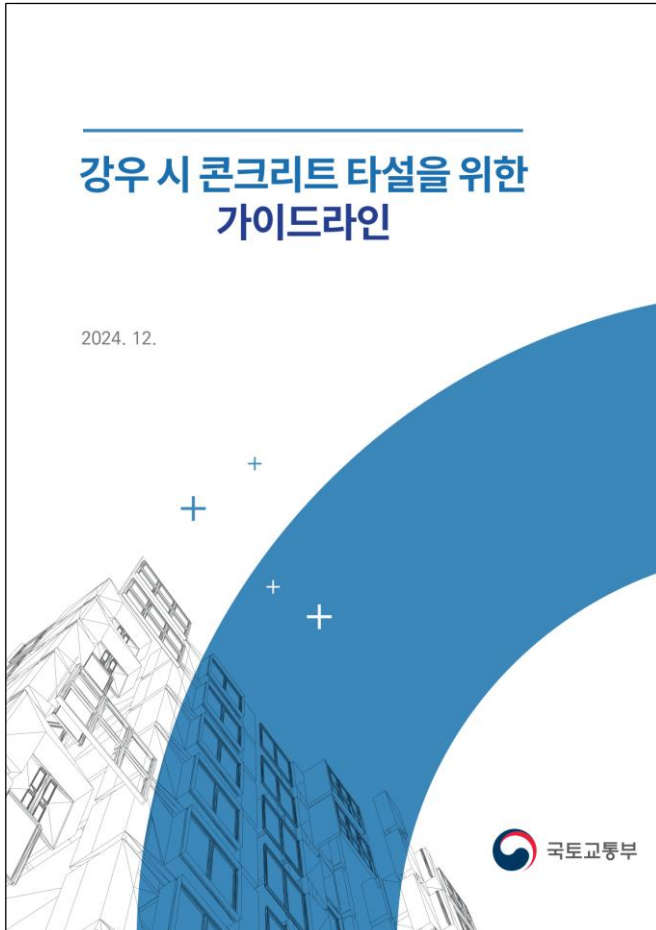
○ 하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손괴 품질 사고



현실이 배제된 규제 강화 :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강우량 3mm 초과 시 타설 중단, 공기는 그대로...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우려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주요 내용

2.1 적용범위

- 시간당 강우량이 3mm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가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을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5.2 강우 시 타설방법

-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의 시공계획에 따르며, 타당한 사유 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 강우 노출 최소화를 위해 비닐시트 등으로 보호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3.2 타설

-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강우 시 공기 중단 현장 부담, 합리적인 공기 조정 기준 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품질 향상 유도 : 싱가포르



반면, 우리와 달리 싱가포르 건설참여자의 자구적 품질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중점 추진

▶ 품질평가 점수로 등급(Band) 환산 – 인센티브 부여 기준



Quality Housing Portal



Last Updated: 1 Jul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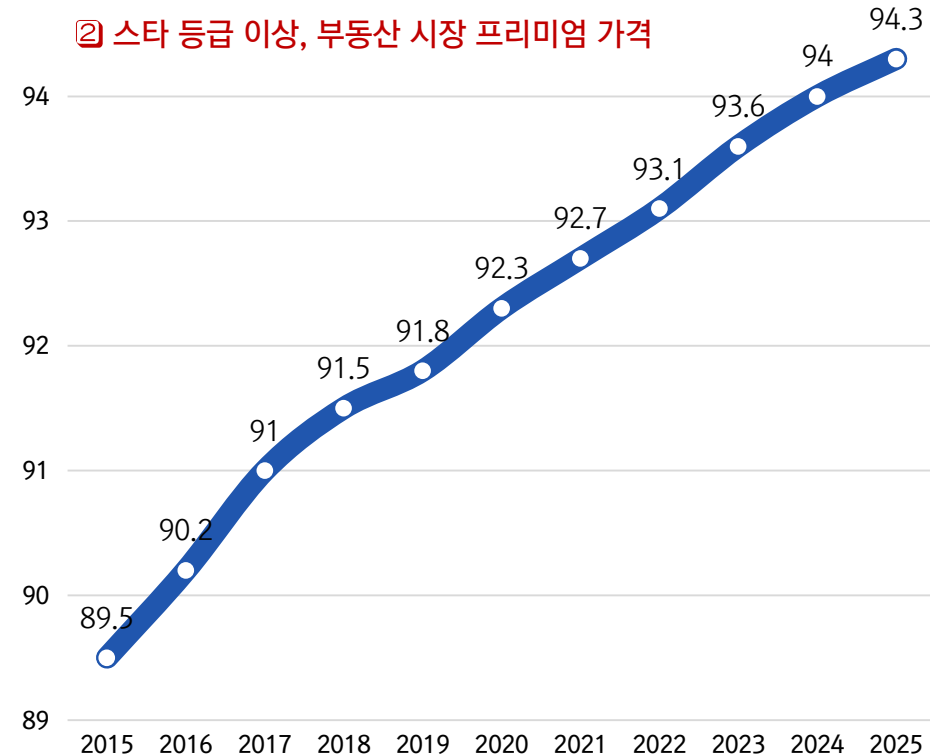
Performance By Unison Construction Pte Ltd						
S/N	Project	CONQUAS Band	Project Developer	Developer	Builder	Year
1	Amber Park	(1)	Aquarius Properties Pte Ltd	City Developments Ltd (CDL)	Unison Construction Pte Ltd	2024
2	19 Nassim	(1)	Parkville Development Pte Ltd	Keppel Land Ltd	Unison Construction Pte Ltd	2024
3	MeyerHouse	(1)	Secure Venture Development (No.1) Pte Ltd	UOL Group Ltd / Kheng Leong Co (Pte) Ltd	Unison Construction Pte Ltd	2022
4	Amber 45	(1)				2024
5	Eden	(1)				2024
6	Principal Garden	(1)				2024
7	Watten House	Under Assessmen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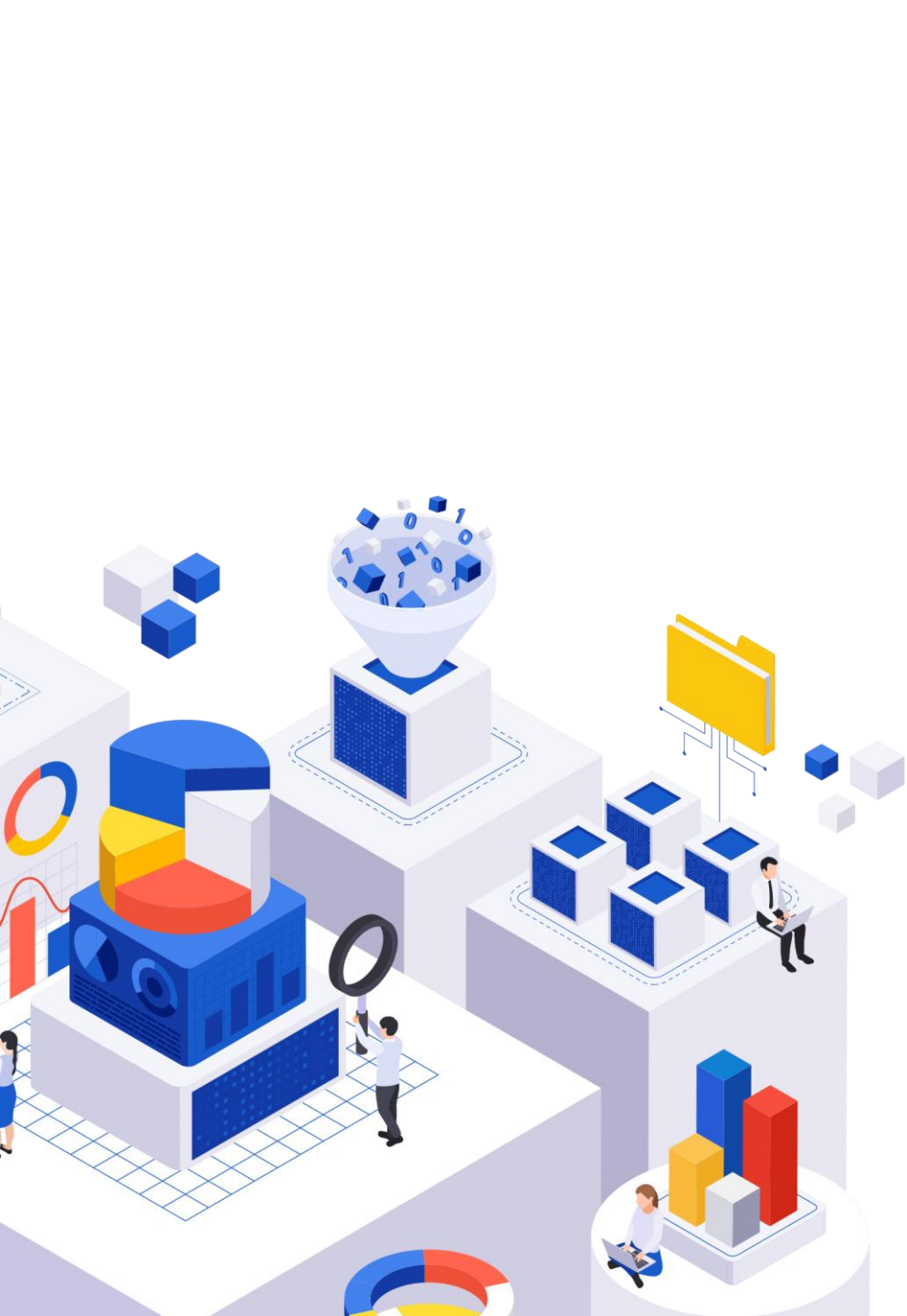
등급	점수	주요 특징
스타 등급	95점 이상	매우 낮은 주요 하자 발생
Band 1	90~95점 미만	
Band 2	85~90점 미만	낮은 주요 하자 발생
Band 3	80~85점 미만	평균적으로 우수
Band 4	75~80점 미만	다소 하자 발생
Band 5	70~75점 미만	하자 발생률 높음
Band 6	70점 미만	불만족(개선 필요)

▶ 인센티브 : 입찰자격 가점 및 우선권, 공사비 보상

① 최근 2년간 CONQUAS 평균 점수보다 3점 높으면, 공사비 일부 추가 지급

② 스타 등급 이상, 부동산 시장 프리미엄 가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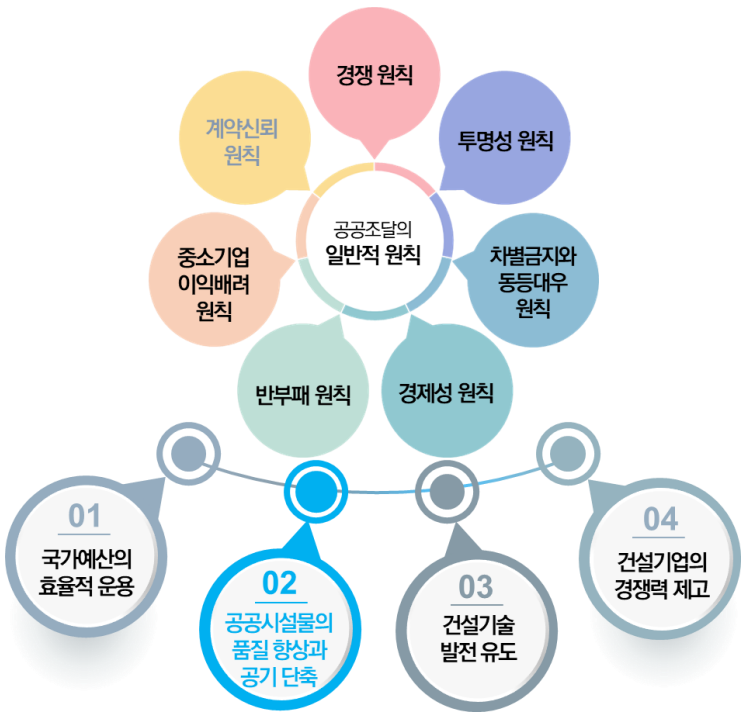
공공조달에서 우회·제한 평가되는 품질과 안전

- ① 그때그때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조달 정책
- ② 대표 사례 : 품질과 안전 관련 중복된 평가지표의 양산
- ③ 그럼에도 반복되는 가격 중심 조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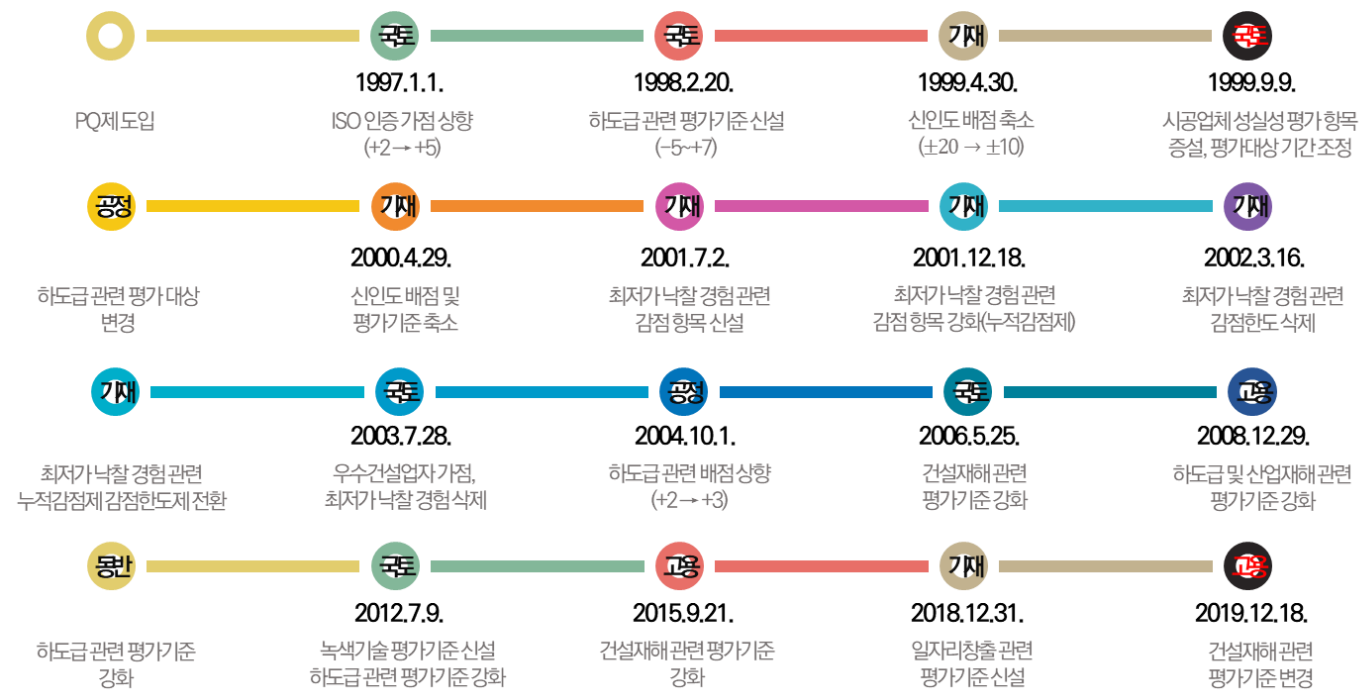
그때그때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조달 정책



공공조달이 달성해야 할 여러 목표 중 시대의 요구 모두를 반영으로 책임 과중 상황



자료: 김진기(2019), 정부조달법 이해 및 이상호(2007),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 인용 및 변형



자료: 전영준(2022), 공공건설 조달정책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대표 사례 : 품질과 안전 관련 중복된 평가지표의 양산



과거 정량 실적 우회한 품질 평가와 과거의 부정적 결과만 반영한 안전 평가로 가격 경쟁 심화 악순환 고리

▶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에 답하기 어렵고 , ‘처벌 받지 않을 만큼’ 만 이란 인식 가능성 농후

PQ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시공 경험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40(45)	
	나.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다. 최근 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술 능력	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45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 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시공평가결과		10
	지역업체참여도	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3 ~ 7	
	나. 하도급 관련 사항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심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일반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전문성 (28.5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점	
	배치 기술자	1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역량 (20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 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 +0.8점
공사 수행 능력 (50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 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계약 신뢰도 (감점)	지중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1) PQ-신인도-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평가요소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가중 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1 ~ +1
	11) 최근 1년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1
	1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1
	13) 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자	-2
	14) 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2회 이상	-1
	15)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 벌금 이상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	-1

2) 중심제-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건설안전 평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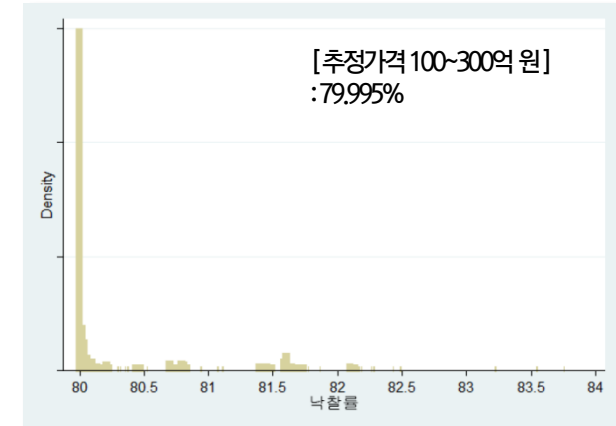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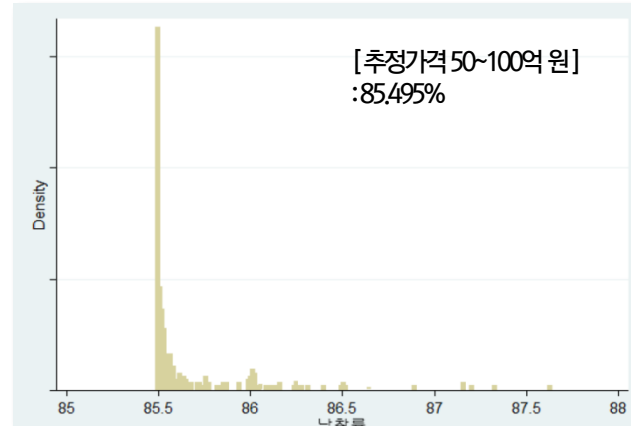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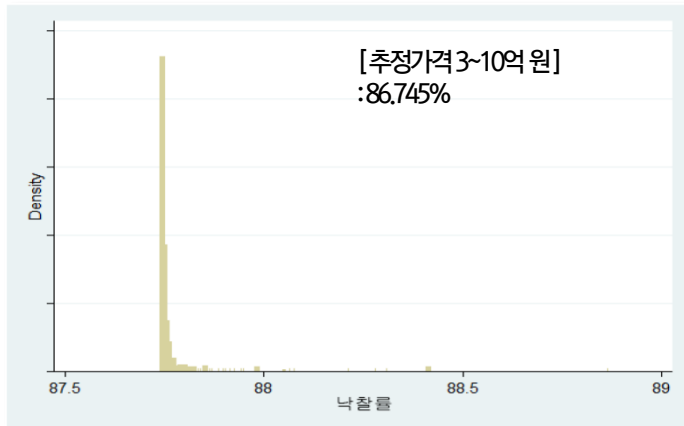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건수	-0.08 ~ -0.4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4 ~ 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0.1 ~ -0.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0.1 ~ -0.2

그럼에도 반복되는 가격 중심 조달 제도



○ 낙찰자 결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이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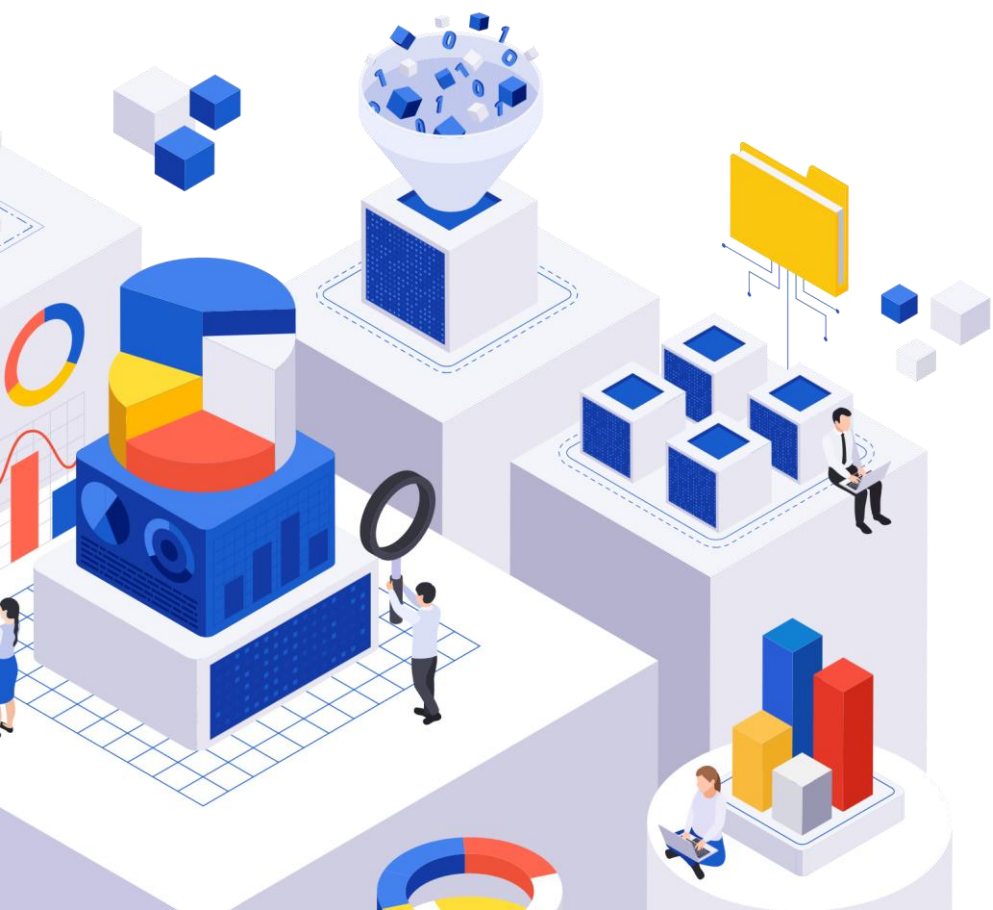
적격심사 공사 낙찰률 분포 현황(2013~2017년)



최저가낙찰제 vs. 종합심사낙찰제 비가격요소 변별력 간접 비교 결과

최저가낙찰제도(2015.1.~2016.1.)		종합심사낙찰제도(2016.2.~2017.3.)	
낙찰자의 투찰가격 백분위율(하위)	29.5%	낙찰자의 가격점수 백분위율(상위)	18.3%
최저가격 투찰자 낙찰확률	23.9%	가격점수 최고점자 낙찰확률	22.5%
분석 시설공사 수	46	분석 시설공사 수	40

자료:강희우·김빛마로(2017), 공공조달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활력 제고의 해법, 규제외 다운사이징

- ① 중층적 규제와 중복적 제재·처벌의 다운사이징
- ② 품질·안전 통합운영 디테일에서 시작
- ③ ‘진짜 옥석 가리기’로 품질관리 전문성 제고
- ④ 산업 체질에 맞는 ‘안전관리’ 전문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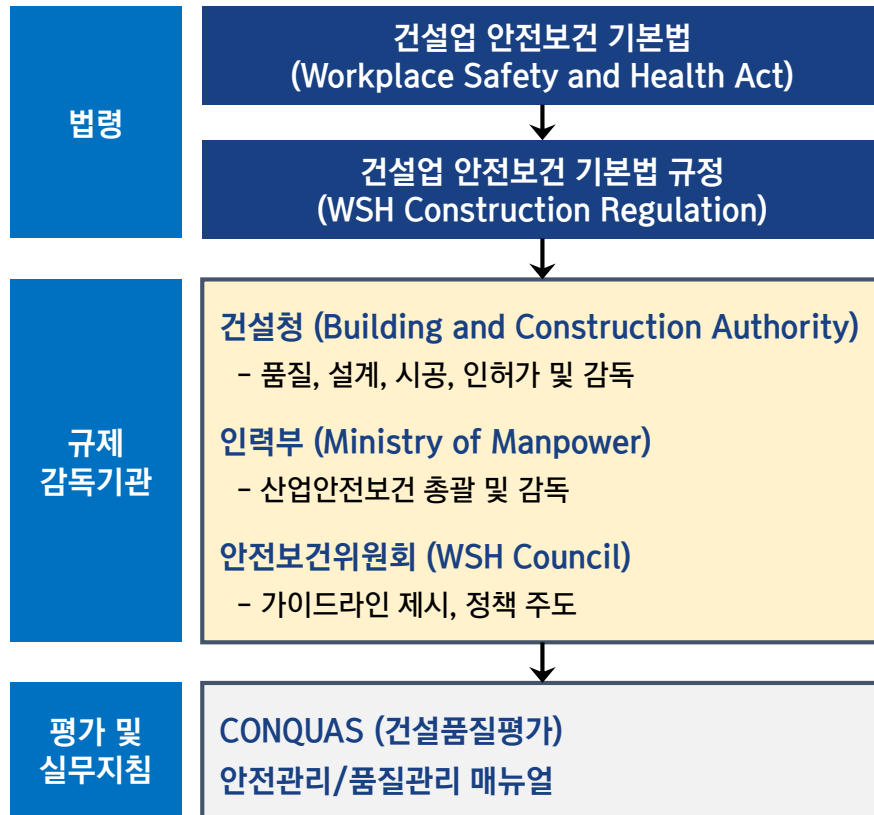
중층적 규제와 중복적 제재·처벌의 다운사이징



○ 규제 다운사이징 : 리빌딩을 통한 중층적 규제 다이어트 및 품질·안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

- 동일 법령 내 여러 부처 유기적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해 고유한 정책 목적 달성
- 규제총량제 도입으로 불필요 또는 실효성 낮은 규제 개선 도모

법령부터 실무지침까지 일원화 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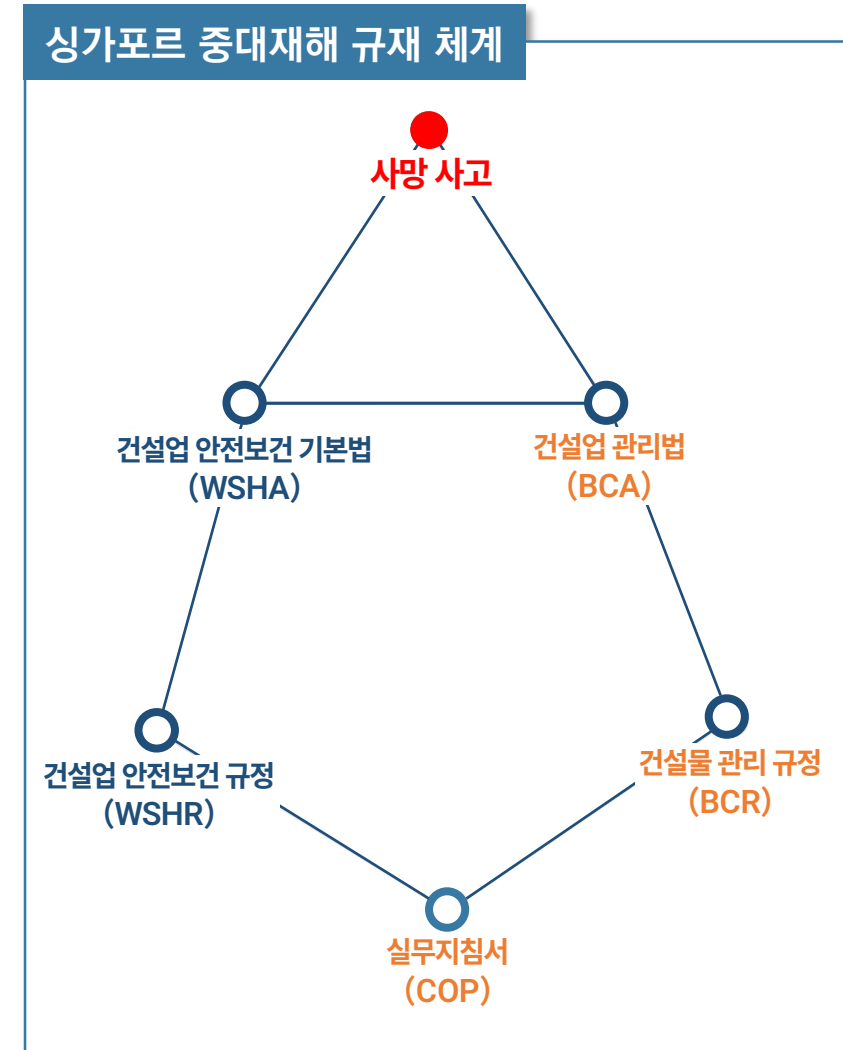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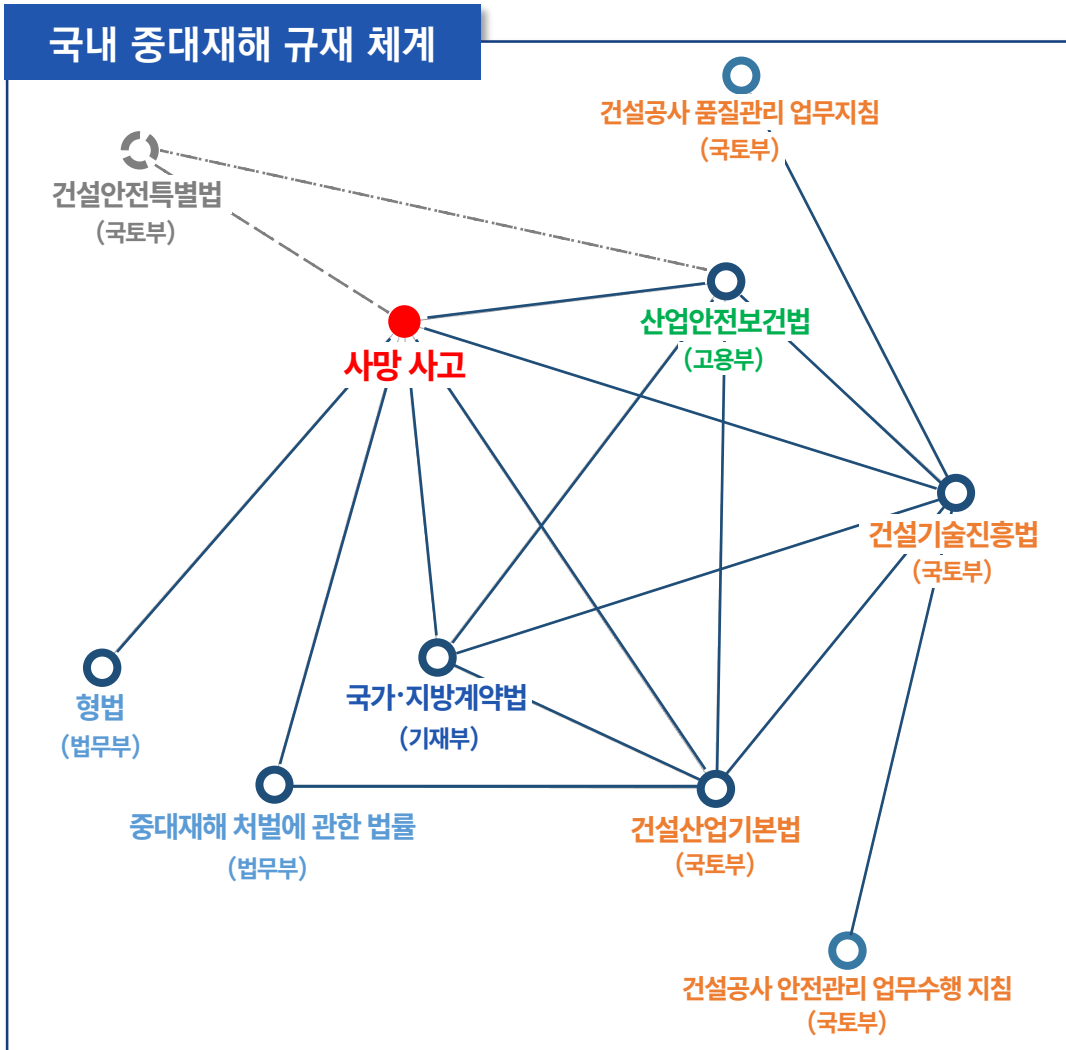
자료 : 싱가포르 건설청

- '정책-규정-감독기관-실무·인증'의 계층화된 체계로, 법적 강제성과 실무 연결성 측면에서 유리
- 건설품질평가(CONQUAS) 등 평가·인증과 현장 관리자 지정, 안전과 품질 교육 의무화로 현장 실행력 확보
- 인력부, 건설청, 안전보건위원회 등 기관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과 실시간 연동 관리
- 법·제도·실무 일체화로 고품질·고안전 달성을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
- 건설품질평가(CONQUAS) 구조·건축·기계·전기 등 온전한 프로젝트 단위 평가 체계 확립



[참고] 중대재해 규제 체계 비교 : 국내 vs.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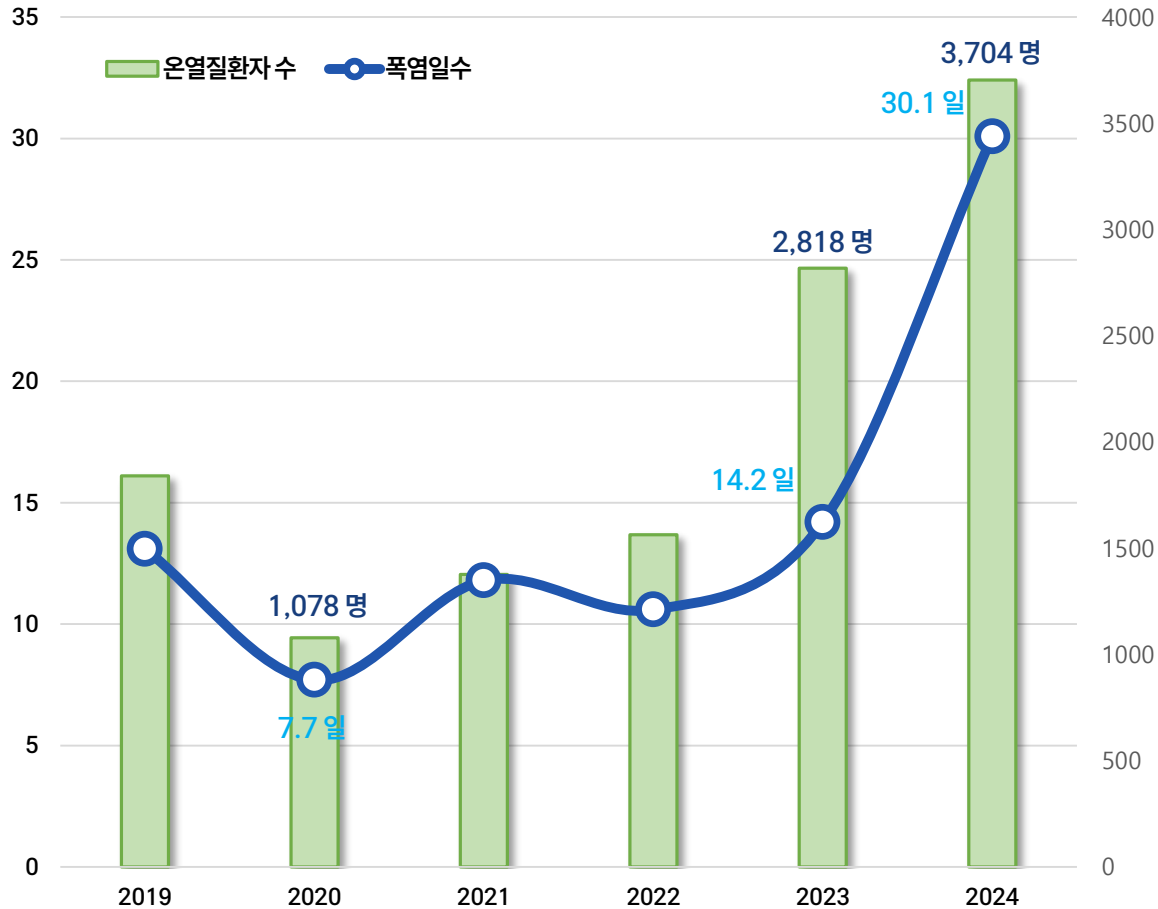
상호 일관된 보완 형태의 규제 체계 구현 필요



품질·안전 통합운영 디테일에서 시작



폭염 대책 이행에 따른 공사비·공기 증가 우려...누가 어떻게 보상?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폭염일수, 검색일 : 2025. 8. 14.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에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2025-산업보건실-246 | 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 안전보건공단 | OPEN | 119 | 112

'진짜 옥석 가리기' 로 '품질관리' 전문성 제고



“오래 했다=전문성” 착각, 품질관리 전문분야 세분화와 검증 강화로 ‘진짜 전문가’ 체계 전환

- (필요성) 건축물의 구조물, 화재 등 중요한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인 검사 및 인증 업무 수행할 전문가 자격의 엄격한 검증
- (목적) 전문가 자격 검증 및 인정 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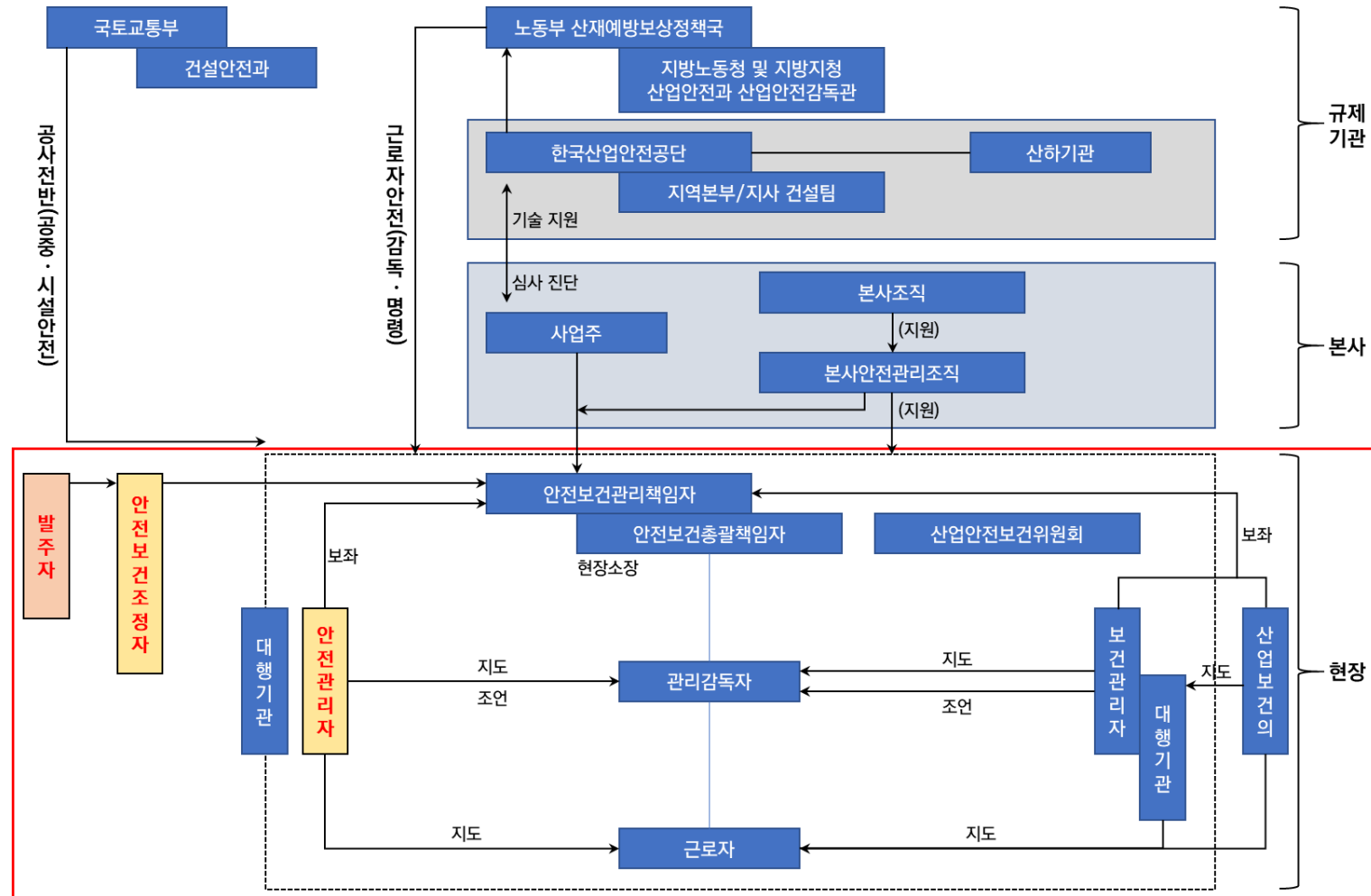
전문 분야	자격 기준	시험	비고
구조	1. 10년간 구조 안전성 증명서 작성, 시공관리 또는 유사 업무 경력 2. 최소 5년 구조 안전성 증명서 작성 및 최소 1년 시공관리 경력	1. 전문 경력 심사 : 최소 5년간 구조 안전성 증명서 2. 서면 및 구술 시험	시험 위원회 (Prüfungsausschuss) 확인서 증명
화재	1. 소방기술 상급 이상 교육 이수자 2. 최소 5년간 건물 또는 고난도 화재 안전 특별 건축물 화재 안전 계획 및 시공 경험 3. 소규모 화재, 제품 및 시공 방식의 화재 거동, 설비 기술적 화재 안전 분야 지식 보유	1. 전문 경력 심사 - 최소 10개 이상 고난도 화재 안전 관리 경력 - 최근 5년간 활동기간 경력 위주 평가 2. 서면 및 구술 시험 : 설비 기술적 화재 안전 지식 증명	
기술 시설 (설비)	1. 최고 건축 감독 당국(oberste Bauaufsichtsbehörde)의 전문감정서 2. 최소 5년간 실무 경험과 최소 2년간 검사 참여	1. 전문 지식 증명 서면과 구술로 평가 - 설비기술, 규정, 기술 규범 등 포괄적 지식 - 건축 규정, 설비 검사, 화재 안전, 시공 규정 포함	
토목 및 기초공사	1. 9년간 건설 분야 실무 경력 필요 2. 최소 3년간 토목 및 기초공사 분야 구조 안전성 증명서 또는 평가 3. 지식과 경험 요건 자문 위원회(Beirat)의 전문 감정서(Fachgutachten)로 증명	1. 2년내 작성된 모든 지반 평가 보고서 제출 2. 최소 10개 보고서 평균 이상으로 어려운 사례 포함 3. 고난도 지반 공학, 지반과 건축물 상호 작용, 기초 안전성 평가, 지반 거동 평가 모델 등 심층적 지식 서면으로 증명	

자료 : 시험 위원회" (Prüfungsausschuss), Muster-Verordnung über die Prüfingenieure und Prüfsachverständigen nach § 85 Abs. 2 MBO

산업 체질에 맞는 '안전관리' 전문가 선정



‘증상에 맞춰 약을 처방하듯’ 현장 위험 잘 아는 건설기술인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



자료 : 한국건설안전학회 (202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



○ 생산과정 규제(품질·안전)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 다이어트와 진정한 전문가 관리 체계로 전환



현재 문제점

- ① 중층적·개별적 품질·안전 규제와 가격 중심 공공조달 운용
- ② 기준 고도화, 규제 및 처벌 강화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품질 사고
- ③ 타 산업 대비 중층적 규제 강화로 산업 위축, 재해 감소 효과에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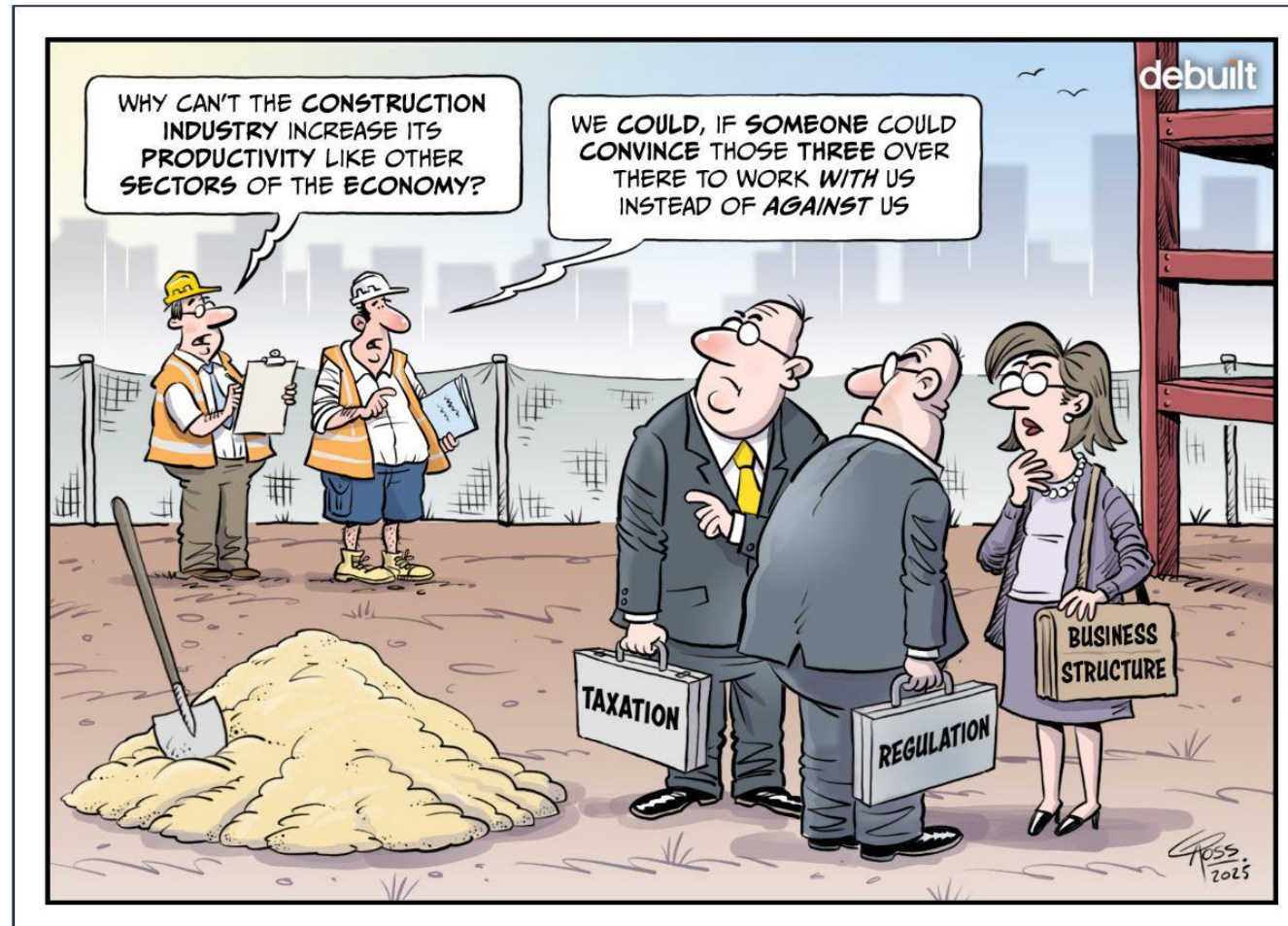


해결 : 규제 다운사이징

- ① 건설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품질과 안전의 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
- ②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법령과 실무' 일체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경쟁 유도
- ③ '진짜 전문가'에 의한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진짜 문제는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억누르는 외부 시스템에 있다.”



자료 : debuilt (2025), Size matters: Why construction productivity is so weak

감사합니다